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탁계석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8·15 경축사에서 국가브랜드 선언을 하고 이듬해 초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간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들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오는 8월 말엔 국가브랜드 종합 박람회가 열려 세계에 자랑할 브랜드 상품과 박제리, 김연아 등 한국을 빛낸 인물들이 총망라될 것이다.

이 없는 소모성 축제나 축제를 위한 축제는 지양(止揚)되어야 한다. 통영 윤이상 국제음악제나 함평 나비축제 등 성공 축제가 적지 않지만 반드시 유명 축제가 아니라도 소박한 생활 축제도 살아났으면 한다. 삶과 밀착된 축제야말로 축제의 정신을 꽃피울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옮겨 가는 물결을 더 주었으면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브랜드가 올라가면 국가 신인도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올라가 이로 인한 국부(國富) 창출이 엄청나다. 얼마 전 밥집을 설치해 한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의 성공은 우리의 위상을 한껏 끌어올렸고 국가브랜드에도 큰 공헌을 할 것이라 믿는다.

옛그제 중국은 조선쪽 아리랑을 등재한다 하여 우리를 황당하게 했다. 이들은 벌써 6~7년 전부터 면밀하게 작업을 해왔고 아리랑뿐 아니라 혼례 풍습 등 여러 세속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 계획을 꾸미고 있다. 바야흐로 눈에 보이는 영토만 전쟁이 아니라 연성(軟性) 국도인 '문화영토' 확보를 위한 싸움이 더 치열할지 모른다.

여수 엑스포,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부산 영화문화의 전당 개관 등 그저 바라만 보던 세계 축제가 앞마당에서 펼쳐지니 경계지감이다. 오는 9월에 열리는 대구 국제육상선수권대회 역시 일반의 열은 관심과 달리 세계 3대 스포츠로 더 국민적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경제와 외교력이 크게 성장한 만큼 국가브랜드위원회 혼자서만 한국을 알릴 수가 아니라 지자체도 도시 브랜드 위원회를 결성해 체계적인 목표를 세우면 어떤가.

이제는 도시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1000여 개가 넘는 축제들을 정비해 수준을 높여야 하는 단계다. 먹고 나면 여운

수입을 통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이 야말로 세계 브랜드의 상품들이 크게 늘어났다. 전자제품만 해도 소니를 부러워했던 시절이 오래전에 지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유독 예술계만큼은 전통과 현대가 서로 동떨어진 듯 서양 예술의 재현에만 너무 많은 시간과 기회를 뺏기고 있다. 우리 오케스트라가 우리 아리랑을 연주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다.

이제는 모든 예술 분야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때이므로 문화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것을 뛰어 넘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제 고장의 토산품이나 자연경관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포츠에서처럼 누구나 참여하고 공연하고 함께 즐기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무엇보다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옹고집으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어!" 라고 외치기만 하고 전통의 재발견, 재해석으로 가공하지 않은 채 물어만 둔다면 아리랑에 이어 많은 것을 뺏기게 된다.

스포츠와 문화가 세상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키워드다. 그래서 21세기를 '총성 없는 전쟁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는다. 결국, 브랜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실체라면 우리보다 상품을 사주는 입장에 대한 배려의 시각이 필요하다.

일전에 읽은 천재 안무가 트와일라 파프의 '여럿이 한 호흡'은 모두의 성공을 위한 협력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유치야말로 대통령을 비롯해 이진희 회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호흡으로' 성공한 명작(名作)이 아닐까.

도시 발전을 위해 지역 경계를 허물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결성해 눈을 부릅뜨고 도시 경쟁력을 위해 브랜드 싸움을 펼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한국예술비평가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와 글로벌 경쟁력

수입을 통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이 야말로 세계 브랜드의 상품들이 크게 늘어났다. 전자제품만 해도 소니를 부러워했던 시절이 오래전에 지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유독 예술계만큼은 전통과 현대가 서로 동떨어진 듯 서양 예술의 재현에만 너무 많은 시간과 기회를 뺏기고 있다. 우리 오케스트라가 우리 아리랑을 연주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다.

이제는 모든 예술 분야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때이므로 문화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것을 뛰어 넘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의료 칼럼



이정남

'정신건강의학과' 과명 변경을 환영하며

에 치료를 꺼려한다"면서 "정신과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칭할 필요성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해야 한다"고 그 당위성을 밝혔다.

한편, 5월 31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이 MOU를 체결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입문약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신장애인 보호가담 등 진정사건 관련 정신장애에 관한 자료,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발굴과 연구,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교환, 기타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 상호 협력 등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고,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배경에는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냉대가 도사리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정신과 의사와들이 나서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1차적 방안으로 과명 변경을 강력히 주장했을까? '정신과'라는 명칭은 어의상 정확한 표현이지만 '정신'이라는 단어만이 부각되면서, '제정신아닌' '정신이 나간' 등과 같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지는 경향이 강했다. 치료 측면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과명만 바꾼다고 해서 편견이 일시에 해소되리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의 출신수범, 그리고 수없이 도사리고 있는 정신과 환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불이익 등을 끊임없이 개선해 가지 않고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자살 기도자의 치료는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이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일반 생명보험 등 보험가입도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으면 제한되는 현실에서 누가 정신과 치료를 떳떳하게 받았는가.

지금도 정신과 병원을 찾아오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면허 취득이 가능할까? 진료기록이 외부에 노출될까봐서 노심초사하는 환자들을 볼 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신건강문제가 일반 신체질환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이 일반화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사회장〉

기고



김형묵

상생 보다 갈등 부른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동도급제도'를 도입,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건설현장에서 '상생협력'이 아닌 '경쟁' 관계를 유발하고 있다.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짝짓기 불균형이 오히려 협력관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적용된 건설공사와 적용되지 않는 건설공사 간에 입찰 경쟁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적격심사 공사와 주계약자 공사의 입찰참여자 수를 비교해 보면, 2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 1건당 평균입찰 참여자 수가 440여개사였던 것에 비해 주계약자방식은 256개사가 불과했다. 180여개의 중소 건설업체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공사가 복합공사여서 주계약자 방식으로 발주하면 하자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의 우려가 높다. 또 책임소재 공방으로 하자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렇듯 지난 1년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시행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생협력·동반성장보다 오히려 경쟁과 갈등을 빚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시대 변화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난 1년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해 종합-전문 건설업체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진정한 동반성장이고 상생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정도 확보된

공사에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용, 종합건설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하자구분이 명확한 공사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셋째, 종합과 전문 건설업 간 칸막이 규제가 폐지돼 서로의 면허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만약 부계약자 공동으로 발주된 전문 공종 면허를 종합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 입찰이더라도 해당 종합건설업체의 단독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참여 제한에 따른 역차별이나, 하자책임 문제 그리고 기술력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수의 차이가 적은 전문 공종을 선택해 발주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아울러 명확한 하자구분을 위해 시공 분담을 분명히 해 발주할 수 있도록 세부 발주지침을 제정,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

선거 때만 민생 챙기는 정치인 행태 씁쓸하다

'민심은 천심이다'는 말이 있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과 같다는 뜻으로 백성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이 속담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정치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거 때만 국민에게 무엇이든 원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공약하고 허리를 굽히며 뽐아 달라고 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정당한 것이 이런 것인가 하고 허탈해진다.

평소에 개인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민생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고 '아이디어 현실이구나'라고 느꼈다. 최소한 주민들 민원만큼은 청취해보고 이해해주고 법과 제도 등에 의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듣는 등 마는 동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치부해버리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선거 때의 초심을 저버리는 태도로서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천심은 민심이다'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인이 신뢰감을

받기 위해서는 선거가 임박한 때만이 아닌 평소에도 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민생정치를 몸에 익히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당선과 낙선을 떠나서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편에 서서 시행하

고 실천했겠노라 하고 약속하고 그 이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고 자세이다. 또 그래야만 국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순옥·광주시 남구 송하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U대회 선수촌 '원주민 재정착' 배려 있어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으로 쓰일 광주시 서구 화정 주공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원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높은 조합원 분양가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겨우 20%에 그치고, 재건축 사업이 자칫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전체 2900세대 가운데 투소지가 화정주공아파트인 조합원은 315세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90%에 이르는 2585세대는 이미 매매나 임대 등으로 아파트를 내놓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이후 재입주 희망자를 감안하더라도 원주민 재정착률은 20%를 밑돌 전망이다.

또한, 거주민이 재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재건축 평수가 25~40평으로 현재의 11~19평보다 2~3배 늘어나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690만 원으로 높게 책

정됐기 때문이다. 영세민이 대부분인 거주민들로서는 1억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화정주공 재건축사업은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뒷전으로 밀려난 측면이 있다. 재건축 무산을 우려한 광주시와 조합 측이 우여곡절 끝에 시공사로 선정한 현대건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현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미분양률이 높은 경우 물량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만큼 재정착 비율 향상 등 '공공성'이 반영돼야 한다. 무엇보다 일부 투기꾼의 시세차익을 통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변질되게 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는 차체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택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 정치권 공조 절실하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광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초과학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R&D(연구개발) 특구의 3각 축 가운데 한 곳이자, 과학기술원이 있는 광주에 방사광 가속기 설치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사광 가속기는 중이온 가속기와 함께 나노·바이오 과학기술과 의료·신약 부문 등에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연구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핵심시설로 꼽힌다. 현재 대전의 과학벨트에 중이온 가속기가 설계 단계에 있고, 포항에 방사광 가속기 2대, 경주는 양성자 가속기 1대가 설치돼 있지만 광주엔 연구시설조차 없는 형편이다.

2014~2020년까지 5000억 원이 투입되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 광주시가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광주시의 노력만으론 역부족이다. 유치 결정이 정치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의 공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방사광 가속기의 광주 유치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긍정적 검토를 하였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은 미온적인 반응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역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 등을 무기 삼아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한편 민주당도 적극 나서 입체적 공조를 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속기 관련 예산이 정부 부처를 통해 국회에 넘어오면 기재부와 예결위 등에서 광주 유치를 전제조건 예산 배정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과학벨트 유치와 관련해 광주가 아닌 대전에 손을 들어준 만큼 이번엔 그에 상응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유 지역을 더 이상 '뒷받'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동안 지역 현안에 대해 무관심, 무능력으로 지탄의 대상된 지역 국회의원 역시 가속기 유치 여부가 내년 총선에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치졸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유치하고 졸렬하다는 뜻이다.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이 의미에 딱 들어 맞다고 할 정도로 유치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대한항공의 A380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18일부터 1개월 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의 모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은 애초 밝힌 대로 18일 부터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외교부 장관은 동북아국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않지만 일본 외무성도 입장이 있다"며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야당 의원들의 울릉도 시찰단 파견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나라가 특정 민간 항공회사를 상대하고 영토 문제를 둘러싼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외교분쟁에서 밀리고 있는데 따른 여론 무마를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조에 변함 없었지만 독도 문제와 한일 관계를 고려해 일본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일일이 맞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서투른 대응에 더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일본 내에서 자민당이 정략적으로 반발하고 영토 문제를 둘러싼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외교분쟁에서 밀리고 있는데 따른 여론 무마를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조에 변함 없었지만 독도 문제와 한일 관계를 고려해 일본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일일이 맞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서투른 대응에 더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 나라가 특정 민간 항공회사를 상대하고 영토 문제를 둘러싼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외교분쟁에서 밀리고 있는데 따른 여론 무마를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대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